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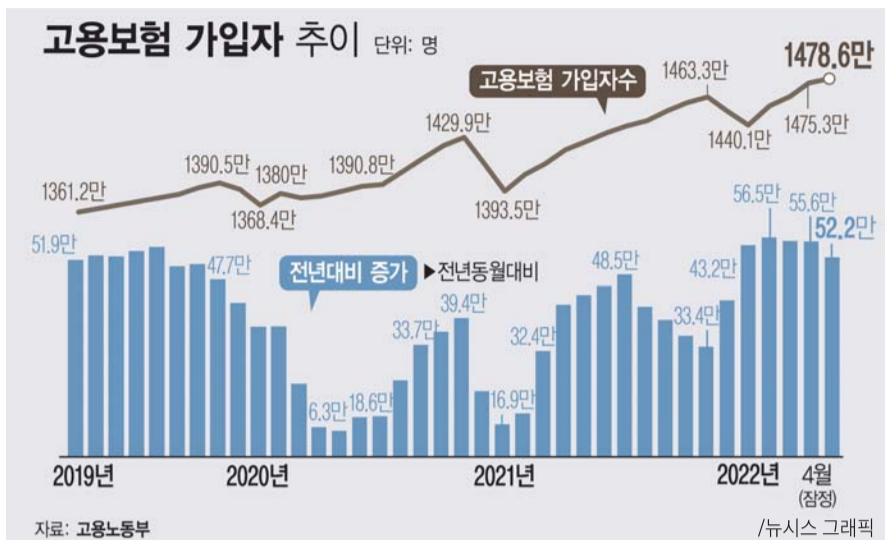
숙박·음식업 일자리 회복세... 취업자수 5개월 연속 증가

고용부 '5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보험 가입자 1478.6만명
전년 대비 52.2만명, 3.7% ↑
“거리두기 해제에 고용 회복 중”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컸던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일자리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말 기준 취업자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147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만2000명(3.7%)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만 보면 지난 1월 54만8000명으로 50만명을 넘어선 뒤, 4월 55만6000명에 이어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내수 활성화



화 기대 등으로 고용이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1020만명으로 전년 대비 40만6000명 늘어났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6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6.3%)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음식·음료업이 3만6300

명, 숙박업이 4000명 각각 늘었다.

도·소매업 가입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도매업은 가공식품(4000명) 등이 늘어나며 전년 대비 1만1900명 증가했다. 소매업도 온라인쇼핑(8700명), 편의점(1만200명) 등에 힘입어 2만2100명 늘었다.

돌봄·사회복지 가입자도 늘어나며 보건업(3만2500명), 사회복지업(7만

2500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달 36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세다.

반도체, 가전, 무선통신 등을 중심으로 전자통신업(1만3100명)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고, 금속가공업(9900명), 고무·플라스틱업(5900명)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및 제조업 업황 개선으로 전기장비업(8800명), 기계장비업(8600명) 등도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운송업은 800명, 육상운송업 중 택시는 7200명 각각 감소해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선업 가입자도 전년 대비 300명 줄었다. 최근 수주 증가에도 구조조정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등이 겹쳐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등 정부의 한시 일자리 축소로 공공행정 가입자도

전년 보다 5600명 감소했다.

취업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22만9000명)에서 가장 많았고, 50대(15만8000명), 40대(6만7000명), 29세 이하(4만6000명), 30대(2만2000명) 순이었다.

지난 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8억원(5.8%) 감소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8만5000명으로 전년 보다 2000명(2.0%) 줄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국 건축 통화정책 등은 아직 국내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천 과장은 “현재로서는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부분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향후 대외적 요인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코로나 검사 일상화에 연간 270조 부담... GDP의 1.27% '비용 논란'

차이나 뉴스&리포트
중 '팬데믹 장기화' 비용부담 논쟁
정부 공공예산 수입의 7.2% 해당

중국에 내세운 대규모 코로나 검사가 천문학적 비용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중국에서 핵산검사로 불리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의 핵심 무기 중 하나다. 실제 초기만 하더라도 선제적인 전수 검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됐지만 팬데믹이 2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비용 부담에 대한 논쟁이 격화됐다.

특히 지금처럼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1, 2선 도시에서 대규모 전수 검사를 계속해야 한다면 검사비용만 많게는 연간 1조4500억 위안(한화 약 2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 하이덴구의 한 주택가 입구에서 주민이 직원에게 자신의 건강 QR코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보다 엄격한 예방·통제 조치가 적용됐다. /신화·뉴스시스

13일 베이징 방역 당국에 따르면 차오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350만명의 주민은 이날부터 사흘 연속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수 검사 명령이 내

려진 것은 지난달 21일 이후 처음이다. 차오양구 산리툰의 한 클럽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탓이다.

상하이에서도 인구 260만명의 민항

구가 지난 11일 주민들에 대한 전수 PCR 검사를 실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주요 대응책으로 코로나 검사의 일상화를 내세웠다. 주요 도시의 주민들은 도보 15분 이내의 거리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아직 자세한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지역에 검사 부스들이 설치됐다.

문제는 비용이다. 의무 검사 명령이 없더라도 학교나 직장은 물론 쇼핑이나 외식 등 일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72시간, 혹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음성 증명이 필요한 상태다.

중국 동오증권에 따르면 4월 이후 중국 전역에서 최소 7개 성급 지역과 55개 도시에서 정기 검사 계획이 시작됐다. 중국 인구의 거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동오증권은 1선 및 2선 도시 인구 약 5억 5000만명이 48시간마다 PCR 검사를 한다면 연간 1조4500억 위안(약 276조 2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27% 또는 중앙 및 지방정부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의 7.2%에 해당한다.

만약 72시간마다 검사하는 것으로 완화해도 연간 비용은 9700억 위안에 달한다. 작년 GDP의 0.85%,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의 4.79%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금은 지방 정부 예산과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기금 등에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지만 점차 여력이 고갈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초 쓰촨성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확고히 고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שמ 기자 smahnt@

금감원, 그림자금융 리스크 관리 나선다

'규정시행 세칙' 개정안 30일 시행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에 적극 나선다. 건설·부동산 투자를 위해 채무보증액 규모가 늘어난 증권사도 있어 리스크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세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림자금융'이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 중개기구나 상품을 말한

다.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계약 ▲부동산 대출 채권·사모사채·지분 증권 투자 ▲부동산 펀드·유동화 증권 투자 등이 업무보고서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금융투자회사가 기한내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규모가 늘고 있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높고, 해외대체투자 등 고위험 여신이 많은 증권사가 주를 이뤘다.

증권사 채무보증의 대부분은 부동산

이 주를 이룬다. 특히 부동산 채무보증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 채무이행 부담 증가로 이어져 증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메리츠증권이 4조 9350억원으로 채무보증액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기 자본(5조688억원) 대비 97.36%에 달하는 규모다.

이재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해 “위험익스포져 인수 속도를 조절 중이나 자본 대비 부담이 상당하고 건전성 저하 위험이 내재한다”며 “익스포져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으로 부동산경기 하락 시 유동성 및 신용위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기술격차 커... 전공교육, 유명무실”

>> 1면 '반도체 인력난 심화'서 계속

관계자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선풍 200마이크로미터 수준이다.

주력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인 10나노보다 2만배나 크다. 때문에 박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도 실제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언이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첨단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비 가격만 수천억에 달할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상시 인력도 여려명 필요하다.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간접적으로 기

업의 장비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교수진 확보도 문제다. 학교와 현장의 기술 격차 때문에 교수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임금 격차가 적지 않은 데다가 교수 임용을 준비하기 위한 논문 실적을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학계와 산업계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전공 교육은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이라며 “교수가 사직을 할 만큼 좋은지도 알 수 없고, 논문 등 임용을 위한 성과를 채우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